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3): 정치 분야

Online Series

2021. 01. 15. | CO 21-03

오 경 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 진 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제8차 당대회에서 정치 분야 목표는 당 중심 지도체제 강화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 권력의 공고화로 집약된다. 구체적 조치는 당의 정책, 제도, 인사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제도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당 인사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를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명확히 했다. 또 간부들의 응집력 강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 사상사업 개선, 감시기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김정은은 충성심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지배연합의 핵심요직으로 발탁했다. 앞으로 정치 분야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8차 당대회에서 총화된 정치 분야 목표는 당 중심 지도체제 강화를 통한 김정은 유일지배 권력의 공고화로 집약된다. 이를 위해 당의 정책, 제도, 인사 부문을 개편했다.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서, 제도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인사는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거쳐 이루어졌다.

1. 유일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제시

당 정책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를 통해 제시됐다. 핵심 과제는 김정은의 절대권력 공고화를 위한 유일지배체제 강화였다. 당의 첫째가는 과업은 김정은의 유일적령도체계 구축이라고 천명했다. 당조직과 일군들에게는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위하여야 하며 그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용화묵과하지” 않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요구했다. 당조직과 간부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 방안은 간부정책·인민정책·사상사업, 감시기구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간부정책과 인민정책은 김정은의 권력유지를 위한 두 개의 핵심 축이다. 일반적으로 권위주의 정권들은 엘리트 분열이나 인민들의 반대로 권력을 잃기 때문이다. 첫째, 간부정책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의 강력한 응집력을 요구했다. 간부들의 분열은 김정은의 권력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당 내에서 간부들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했다.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당대회에서도 간부들에게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또한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이 검증된 간부선발과 육성을 요구했다. 당 사업총화보고에서는 간부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양과 통제사업 강화, 그리고 엄격하고 원칙적인 당 간부 선발을 주문했다. 게다가 당의 기층조직인 초급당과 당세포 강화도 주문했다. 초급당과 당세포는 당원들의 통제와 사상교양을 통해 김정은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이다.

둘째, 인민정책은 김정은과 당에 대한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김정은은 권력승계 이후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민심 이반은 김정은의 정당성을 허물고, 통치기반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인민중심 통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당의 기본정치방식이라고 명문화했다. 영도사상의 중핵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고 선언했다. 김정은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 것을 요구했다.

셋째, 당 사상 사업은 당원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조했다. 사상 사업은 혁명을 영도하는 당의 기본임무의 하나이며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전 기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됐다. 사상 사업 방안은 선전선동 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일관리제 원칙을 제시했다. 사상 사업의 주 내용은 당의 애민 정신을 강조했다. 당원들은 이민위천

사상을 고수하며, 친인민적·친현실적으로 당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당의 첫째가는 경제대상·투쟁대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이므로, 당조직들은 그 사소한 요소와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은과 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상 사업 내용을 제시했다.

넷째, 감시기구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간부들과 당원들 및 인민들에 대한 감시기구의 안정적 작동은 정권의 사활을 좌우한다. 김정은은 사법검찰·사회안전·보위기관들이 사회주의제도의 믿음직한 보위자로서 제도보위·정책보위·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책임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에 대한 인민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을 쓸어버리고, 온 나라에 사회주의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할 것도 지시했다. 사법검찰·사회안전·보위기관들은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감시·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2. 당규약 개정과 제도적 변경

이번 당대회에서는 당규약 개정을 통해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당 제도 개편을 단행했다. 혁명의 성격과 사명은 김정은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정식화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정식화됨에 따라서 향후 5년의 국가전략도 김일성-김정일을 거쳐서 형성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추진 수단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천명했다. 강력한 군사력은 체제를 보위하고,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적 안정을 보장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물질 기반임을 밝혔다. 북한은 강력한 군사력 건설을 기반으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의 당 직책은 당 총비서로 개편됐다. 김정은의 당 직책은 권력승계 직후인 2012년 4월 제1비서로 정했고,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거치며 위원장으로 변경됐다.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총비서 직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에게 당 총비서 직책을 부여한 것은 김정은을 김일성·김정일과 동일한 수령의 반열에 올려놓고,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신격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는 더 강화될 것이다.

개정 당규약은 김정은 유일지도체제의 중핵으로써 당 중심 체제를 강화했다. 당 우위원칙이 재확인됐고, 김정은의 절대 권력을 떠받치는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할 것을 명문화했다. 당은 모든 국가기구와 군부를 완전하게 지도·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했다. 당의 영도적 역할과 권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임비서·비서·부비서 직제와 비서국도 복원했다.

당을 통한 군부장악 조치가 더욱 강화됐다. 군부는 통제될 경우 정권보위세력이지만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치명적인 정권위협세력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당 중심 통치를 실행하면서 선군정치를 통해 확장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는 선군정치의 유산을 완전하게 청산했다. 당은 조직지도부와 군정지도부를 통해 군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인민군의 책무는 “당의 영도를 받들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됐다. 기본정치방식은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로 바뀌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 군부를 이용해서 정권을 수호했던 선군정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당조직과 당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검열과 감시기능도 이중삼중으로 강화했다. 이는 당조직과 당원들의 규율위반과 기강해이 현상이 팽배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2020년 당정치국회의에서는 당 내 부패 문제를 2차례나 공식적으로 다뤘다. 2020년 2월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간부 양성기지인 김일성고급당학교 부교장 등이 입학과 성적 채점 과정에서 돈을 받고 특혜를 준 사건을 거론하면서 당위원회를 해산하고, 관련 간부들을 해임했다. 리만건 조직지도부장도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1월에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평양의학대학 당위원회의 입시비리와 강제 모금, 매관매직 행위를 “엄중한 형태의 범죄행위”이자 “반당적, 반인민적, 반사회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비호한 당 담당 부서, 사법검찰, 안전보위기관들의 극심한 직무태만도 문제 삼았다.

개정 당규약은 당 내 부정부패 행위를 김정은의 유일지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중앙검열위원회를 흡수해서 당채정사업 검사 기능과 함께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저해하는 당규율위반행위에 대한 감독조사 기능까지 부여받았다. 당중앙검사위원회는 당의 핵심 권력기구로 변했다. 당 비서국에도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했다. 규율조사부는 당조직과 당원들의 김정은의 유일적 지배를 침해하는 규율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부서로 추정된다. 법무부는 과거 당 행정부와 같이 사법검찰사회 안전·보위기관을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당 내 검열과 감시는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원들의 질적 수준 개선 조치도 취했다. 이것은 김정은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심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보당원 생활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김정은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심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 입당을 위한 문턱을 높였다. 당원과

당조직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했다. 3년 이상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당원은 제명하고, 맡은 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 당조직과 당기관안의 부서들은 경고, 엄중경고, 사업정지책벌을 부과 받게 만들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됐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실질적 권한과 기능이 대폭 확장됐다. 상무위원회는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수시로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상무위원들은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 정치국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의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율에 관계없이 참가자를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사적 긴급 사태나 핵문제와 같이 긴박하고 높은 보안 수준을 요구하는 군사적 문제들의 의사결정구조를 효율화·간소화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3. 인사 개편

김정은은 지배연합 구성원들 중 일부 인사들을 교체했다. 이번 인사 조치는 문책성 교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세대교체와 실무능력 위주의 인사 및 측근 인물의 핵심 요직 발탁을 의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당의 최고위직 인물들로 구성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도 일부 교체됐다. 노령의 박봉주 부위원장이 해임되고, 조용원 조직비서가 새롭게 임명됐다. 당과 국가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당중앙위원회 비서와 비서국 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이루어졌다. 당 비서는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 당 비서는 조용원(조직), 박태성(선전), 리병철(군사), 정상학(감사), 리일환(근로단체), 김두일(경제), 최상건(과학교육)이 임명됐다.

당 비서는 당조직과 선전선동, 핵과 군부, 경제와 과학교육 등을 관장하는 3가지 핵심 기능만 남겼다. 김정은의 국가운영 방향이 집중과 효율에 방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조직 부문은 조용원 조직비서를 중심으로 김재룡 조직지도부장, 박태덕 규율조사부장, 허철만 간부부장, 김형식 법무부장이 담당하게 되었다. 선전선동 부문은 박태성 선전비서를 중심으로 최휘 선전선동부장(추정)이 주축을 이룬다. 핵과 군부는 리병철 군사비서를 중심으로 오일정 군정지도부장이 지도·통제한다. 경제와 과학교육은 김두일 경제비서와 최상건 과학교육비서를 중심으로 박명순(경공업), 리철만(농업) 등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인사 개편에서는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받은 지배연합의 일부 인사들이 부상했고, 일부 인사들이 밀려났다. 가장 주목할 인물은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

비서다. 조용원 조직비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임명된 것은 당의 공식적인 권력서열과 실제 권력서열을 일치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조직비서는 김정은 총비서를 제외하고, 당과 국가의 최고 실권자이기 때문이다. 조용원은 오랜 조직지도부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 당조직을 관리하고,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용원은 김재룡 당조직지도부장과 함께 김정은 정권의 존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박태덕 규율조사부장은 당중앙검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정상학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김정은의 유일적 지배를 저해하는 당조직과 당원들의 규율위반에 대한 조사·검열과 당 내 기강과 규율 확립 임무를 담당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일정은 군정지도부장으로서 최부일의 뒤를 이어 군부 지도·통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의 군부 장악은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부부장과 오일정 군정지도부장을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인사에서 밀려난 대표적 인물은 김여정이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했다. 김정은은 후계자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여정을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 후계자설은 김정은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이다. 김여정 후계자설이 확산될수록, 김정은의 건강이상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거나 김정은의 절대적 권위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로 인해서 김여정 후계자설은 당분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정은은 지배연합 내에서 동생인 김여정을 가장 신뢰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여정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은 낮다. 앞으로도 김여정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김정은을 보좌할 것이다. 또 김정은과 대남·대미 부문 간부들의 긴장관계도 김여정의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 그동안 김정은은 대미·대남 부문의 핵심 엘리트들이 실수를 하거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했다. 예컨대 하노이 노딜 이후 대미외교 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문책을 받았고, 일부 인사들은 숙청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남·대미 부문 간부들은 정책 실패로 인한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김여정을 전면에 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다. 김여정은 대미·대남 부문의 간부들에게 매우 훌륭한 안정장치인 셈이다. 실제로 김여정은 당대회 직후인 1월 13일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대미·대남라인은 당 내 위상이 크게 약화됐다. 당비서국에서 국제담당과 대남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전문부서에 국제부장과 통일전선부장만 남았다.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

여정은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밀렸다. 당 부위원장(현 비서국 비서)이었던 김영철은 통일전선부장으로 위상이 하락했다. 대미외교를 담당했던 최선희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됐다. 대미·대남라인의 당 내 위상 약화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실패와 경색 국면 장기화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핵무력 개발을 담당하는 이병철이 군부에서 유일하게 상무위원까지 승진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것에 비교해 볼 때, 대미·대남라인의 약화는 문책성 조치라는 분석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또 대미·대남라인의 당 내 위상 약화는 김정은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예고한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서 당 중심 체제를 재정비했고, 당의 노선과 정책 제시, 제도 개편, 인사교체를 진행했다. 김정은 체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정식화를 통해서 권력의 정통성과 계승성을 명확히 했다. 또 간부들의 응집력 강화, 인민대중 제일주의 통한 인민들의 지지 확보, 사상사업 개선, 감시기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은 충성심과 능력이 검증된 인물들을 지배연합의 핵심요직으로 발탁했다. 앞으로 정치 분야는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INU 2021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